11월17일 Market Index
코스피 4968.48 (-132.02)
코스닥 650.06 (-15.59)
금리(국고채 3년) 3.725 (-0.018)
환율(원-달러) 1338.2 (+2.50)

metro 경제

하나금융그룹

2002년 5월 31일 창간 독자센터 (02)721-9841 구독료: 월 20,000원 / 1부 1,000원 뉴메트로 11주년 대한민국 희망을 찾아서 2026년 11월 18일 수요일

장사도 폐업도 막막한 소상공인
"선제적 경영진단·정책지원 필요"

중기중앙회, 소상공인 실태조사
평균 폐업비용 1386만원 달해
2명 중 1명은 대출상환 등 지연
연말 앞두고 소비둔화까지 우려

소상공인들의 아우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음식점, 카페 등을 운영하다 장사가 안돼 문을 닫겠다고 마음 먹어도 비용과 기간을 감당할 수 없어 폐업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폐업을 결심한 시점의 빚은 평균 8192만원, 폐업 비용은 평균 1386만원에 달했다. 은행권 등에서 빌린 돈과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설상가상으로 금리 인상까지 예고되면서 부담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 〈관련기사 3면〉

국내외 경제 불안, 계속되는 중동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중심의 물가 상승 등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씀씀이도 위축되고 있다. 연말 특수는 꿈도 못꾸는 모습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노란우산 폐업공제금을 수령(1116명)했거나 공제금을 받은 후 다시 창업해 노란우산에 가입한 재창업자(633명) 등 총 1749명을 대상으로 '2026 폐업 소상공인 경영실태'를 조사해 17일 내놓은 결과에 이같은 고충이 고스란히 담겼다. 이에 따르면 소상공인들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기까지 걸린 기간은 1년이 훌쩍 넘는 평균 16.7개월에 이르고 있다. 2명 중 1명은 폐업이 늦춰지면서 1000만원이 넘는 비용을 더 쓴 것으로 파악됐다. '폐업 지연'(경험자 318명) 이유는 점포 인수자를 찾지 못했거나(34.9%) 대출금 상환 부담(21.7%)이 크기 때문이다. 사업자등록 말소까지 기간이 길어지면서 '3000만원 이상 더 썼다'는 곳도 24.8%에 달했다.

문을 닫고서도 절반 가량은 생계 때문에 다시 창업에 뛰어들었다. 재창업자의 62.1%는 업종도 전과 다르지 않았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국내 20개 은행 대출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폐업 후 6개월 이상 지난 자영업자 27만5981명의 은행 대출잔액은 21조12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 말 13조7108억원에서 무려 54%인 7조4092억원이 늘었다. 여기에는 개인사업자대출 외에도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까지 포함돼 있다.

대출잔액도 많지만 문제는 자영업자 연체율(폐업 1년 미만 기준)이 2021년 말 2.27%에서 올해 6월 말엔 10.84%까지 늘어나는 등 대출의 질도 빠르게 나빠졌다는 점이다. 한국신용데이터(KCD)가 최근 내놓은 '2026년 3분기 소상공인 동향 리포트'에 따르면 올해 3분기(7~9월) 말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액은 16조3542억원으로 전년 동기와 비교해 21.5%(2조8184억원)나 늘었다. 전분기와 비교해서도 7.3% 증가한 것으로, 특히 은행권(3.9%)보다 상대적으로 이자가 높은 비은행권(8.1%)에서 연체금액이 크게 증가했다.

이런 현실에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는 26일 예정된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3.00%에서 3.25%로 0.25%p 올릴 경우 부담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 최대 소비시기인 연말을 앞두고 소비 둔화까지 우려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민간소비증감률은 -0.2%를 기록하며 2022년 4분기 이후 15분기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고 있는 것이다.

중기중앙회 김희중 정책본부장은 "사후약방문보단 소상공인들이 위기를 맞기 전에 경영진단과 맞춤형 컨설팅 등을 통해 폐업까지 가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 정책도 기존의 수 많은 대책 중 필요한 것들을 패키지로 묶어 종합적으로 지원해야 효과가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한성숙 "수능 부정행위, 무관용 원칙 대응"

〈국무총리〉

시험장 인력 추가 배치… 감독 강화
입학취소·최대 10년 응시 제한 제재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 전국에 위급재난문자가 발송된다.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수험생 옷에 단추마다 스티커를 붙이고 소매와 옷깃까지 점검한다. 부정행위 적발 시 응시 제한 최대 10년에 입학 취소까지 '무관용'을 내걸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경찰청 등이 배석한 가운데 한 국무총리는 "수험생들이 정직하게 준비해 온 노력이 부정행위로 침범당해서는 안 된다"며 "사전 예방, 시험장 감독, 사후 조사와 제재에 이르기까지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3면〉

수능 당일인 19일 오전 8시25분부터 8시30분 사이 전국에 위급재난문자를 발송한다. 시험장에 제출하지 않은 휴대전화가 켜져 있으면 알림이 울리도록 해 미제출 기기를 확인하려는 조치다.

1교시 시작 전 휴대전화를 비롯한 전자기기는 전원을 끈 상태로 수거해 시험본부에 보관한다. 가방은 교실 밖 복도에 두도록 하고, 복도 감독관을 추가 배치해 미제출 기기와 통신 관련 이상 징후를 살핀다.

안경과 복장 점검도 강화한다. 수험생은 1교시 전 안경을 책상에 내려놓고 스마트안경 여부를 확인받는다. 초소형 카메라 은닉을 막기 위해 옷 단추마다 스티커를 붙이고, 양 소매를 걷은 상태에서 옷깃과 단추 등도 점검한다. 3교시 시작 전에는 소지품을 다시 전수 점검하고, 스마트안경은 매 교시 착용 상태에서 확인한다.

전국 1312개 시험장에는 기존 감독관 7만5000여명 외에 스마트기기 전담인력 1800여명과 복도 감독관 6600여명 등 8400여명을 추가 배치한다. 이들은 스마트기기와 미제출 휴대전화, 통신 관련 이상 징후 등을 점검한다.

부정행위 제재도 강화한다. 정부는 현재 1년인 응시 자격 제한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확대하고, 올해 수능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할 계획이다.

/김수정 기자 kcrystal@

오천피 붕괴… 'AI투자 불안·외인이탈' 급랭

엔비디아 사태·글로벌 긴축기조 영향
아시아 증시 흔들… 대만 등 일제 하락

코스피가 9개월 만에 '4천피'(코스피 지수 4000)로 주저앉았다. 젠슨 황 전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 스캔들이 불러온 인공지능(AI) 투자 불안감과 글로벌 중앙은행의 긴축 기조가 겹치며 투자 심리가 얼어붙었다. 〈관련기사 4면〉

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2.59% 내린 4968.48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피 종가 기준 4000선대로 내려간 건 지난 2월 2일(4949.67) 이후 9개월 만이다. 이날 외국인 투자자는 코스피에서 1조4460억원 순매도(매도가 매수보다 많은 것)했다. 기관과 개인은 각각 5440억원, 4220억원 순매수하며 물량을 받아냈다.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도 4076조8390억원까지 줄며 4000조원선을 '턱걸이'했다.



17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종가가 표시되고 있다. /뉴시스

국내 증시의 '투 톱'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3.3%, 1.96% 내린 19만300원과 109만8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 16일(현지 시각) 미국 증시에서 주요 반도체주가 줄줄이 급락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글로벌 AI 반도체 1위 기업인 엔비디아는 젠슨 황 전 CEO의 불륜 및 사임 여파가 이어지며 4.12% 하락했고, 마이크론 7.62%, AMD 5.58% 등 반도체주가 일제히 약세를 보였다.

시장에서는 엔비디아가 주요 AI 기업과 진행해온 이른바 '순환 거래' 구조 아래에서 엔비디아의 위기가 산업 전체의 위기로 번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확산하는 모양새다. 여기에 미국 증시에서 앤트로픽이 상장을 앞두고 있다는 점도 유동성(외국인 매도) 측면에서 국내 주식 시장에 부담이다.

한편 아시아 증시도 흔들렸다. 이날 일본(-1.34%), 대만(-4.51%)이 급락했고 중국, 홍콩도 일제히 하락했다.

/김아영 기자 aykim@

IMF "韓 경제성장률 4%대 근접할 것"

한 달 만에 성장률 예측치 0.6%p 상향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4%에 근접할 것이란 전망이 제시됐다.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 성장률 예측치를 불과 한 달 만에 0.6%포인트(p)나 상향 조정했다.

IMF 미션단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년 연례협의 결과'를 발표하고,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전망치를 종전의 3.3%에서 3.9%로 크게 높였다. 첨단기술산업 수출의 급증, 투자 반등, 견조한 소비 등을 근거로 들었다.

내년에도 견조한 성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내년 전망치 역시 종전의 2.8%에서 3.3%로 올려 잡았다. 첨단기술산업의 소득 증가가 소비로 확산되고, AI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투자도 본격화할 것으로 진단한 데 따른 상향이다.

IMF는 "글로벌 AI 호황은 사상 최대 규모의 반도체 수출을 견인하며 한국 경제에 이례적 성장 동력을 불어넣고 있다"며 "이는 탄탄한 기업 실적 및 재정수입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올해 2.7%, 내년 2.3%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메트로경제 2026 뉴테크놀로지포럼
오늘 오후 2시~5시,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3층 페럼홀

메트로 한줄뉴스

▲ 與 김문수 "최민희, 제명 포함 중징계해야…가장 큰 해당행위"
▲ 이 대통령 "김대중·주룽지·오부치 한중일 협력, 복합위기 시대 배워야 할 교범"
▲ 민주당, 오는 19일 본회의 추진…"민주유공자법 반드시 통과"
▲ 권칠승 "의무공개매수제 균형 찾을 것…주주보호·M&A 활성화 함께 이룰 방안 마련"



▲ 감사원 "항만 위험물 7.3% 잘못 보관해 폭발 위험…관리 허점"
▲ 외교2차관, 카타르 국무장관과 면담…韓 메가 프로젝트 설명
/사진 뉴시스